

안보 현안에 대한 안보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7. 4.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 김도연



I 들어가는 말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관련 주요국인 미국은 태도 변화를 예고하고, 중국도 미국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양상이다. 한편, 한반도 안보 당사국인 한국은 대선 정국에서 안보 문제가 부각되어 안보 대선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각 후보들 간 안보 공약 및 정책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드배치, 전술핵 재반입, 전작권 환수 문제, 국방비 규모 등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후보들은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정확히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회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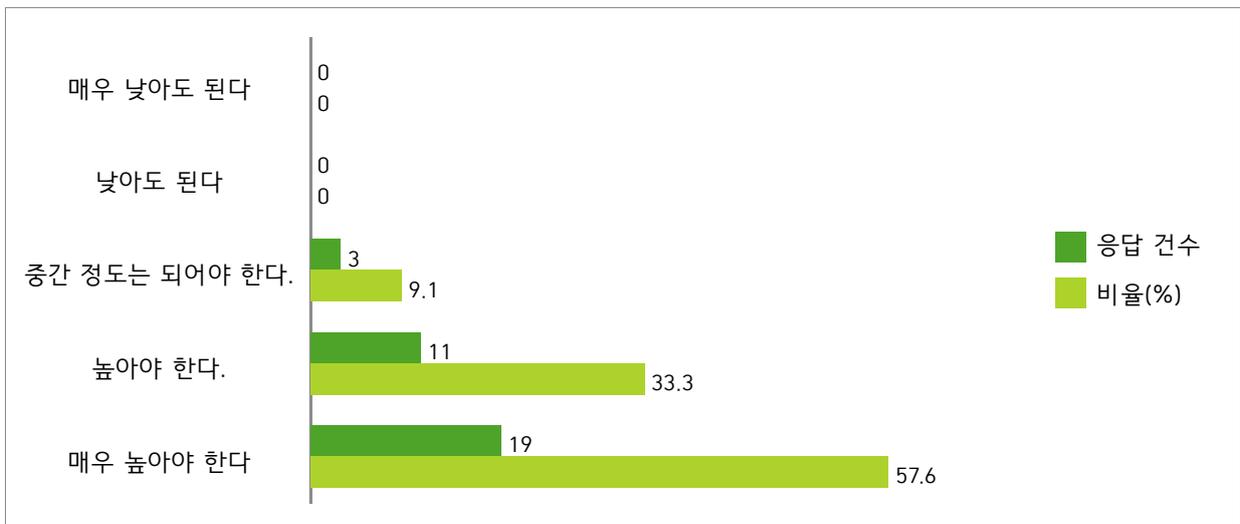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안보이슈들에 대해 안보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안보 전문가들의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본론

1. 안보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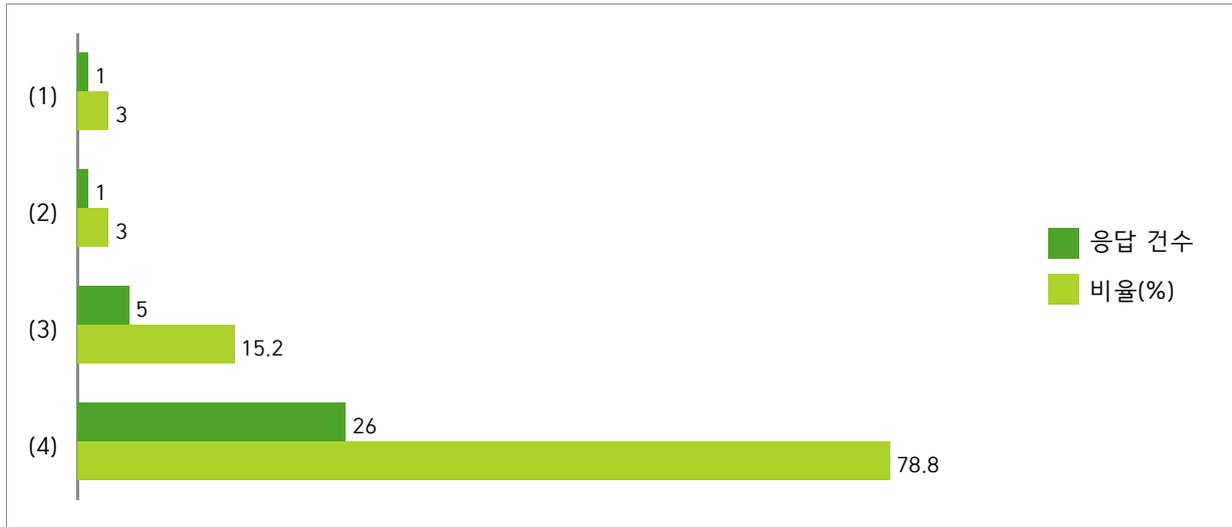
안보·대북·통일문제에 대해 후보가 가져야 할 전문성 수준에 대해 안보전문가 33명 중 19명이 후보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답했고, 11명은 높아야 한다, 3명은 중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질문 1> 참고).

질문(1) 안보·대북·통일문제에 관해 후보가 가져야 할 전문성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역량을 강화했을 때 남북 상생과 평화통일의 가능성 간의 관계에 안보전문가 33명 26명이 일시적으로 남북상생은 저해되지만 장기적 상생구도 정착과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5명은 일시적으로 남북상생은 저해되지만, 장기적 상생구도 정착과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질문 2 참고).

질문(2) 안보역량을 강화했을 때 남북 상생과 평화통일 가능성 간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상생을 저해하고 평화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상생은 저해하지만 평화통일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 ③ 일시적으로 남북상생은 저해되지만, 장기적 상생구도 정착과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④ 일시적으로 남북상생은 저해되지만, 장기적 상생구도 정착되며 통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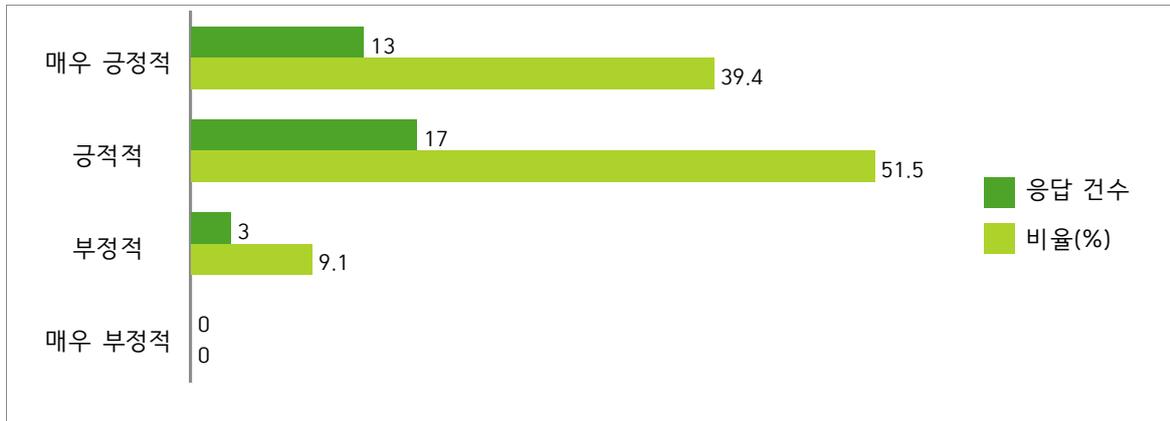
2. 외교 관계 및 안보 동맹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있어, 한미동맹을 확실히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7명, 한미동맹을 조금 더 중시해야한다는 의견이 6명이이었다. 반면, 한중관계를 더 중시여겨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질문 3 참고). 일본과의 안보협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가 17명, 매우 긍정적이다가 13명으로 조사되었고,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3명 있었다(질문 4 참고).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부적절 하다는 견해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매우 부적절 11명, 적극적 재검토 5명, 매우 적극적 재검토 1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 1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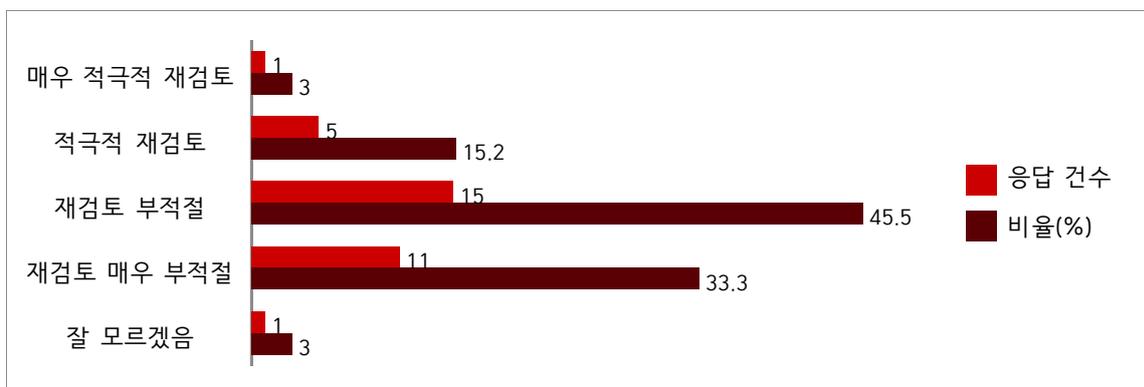
질문(3) 앞으로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4)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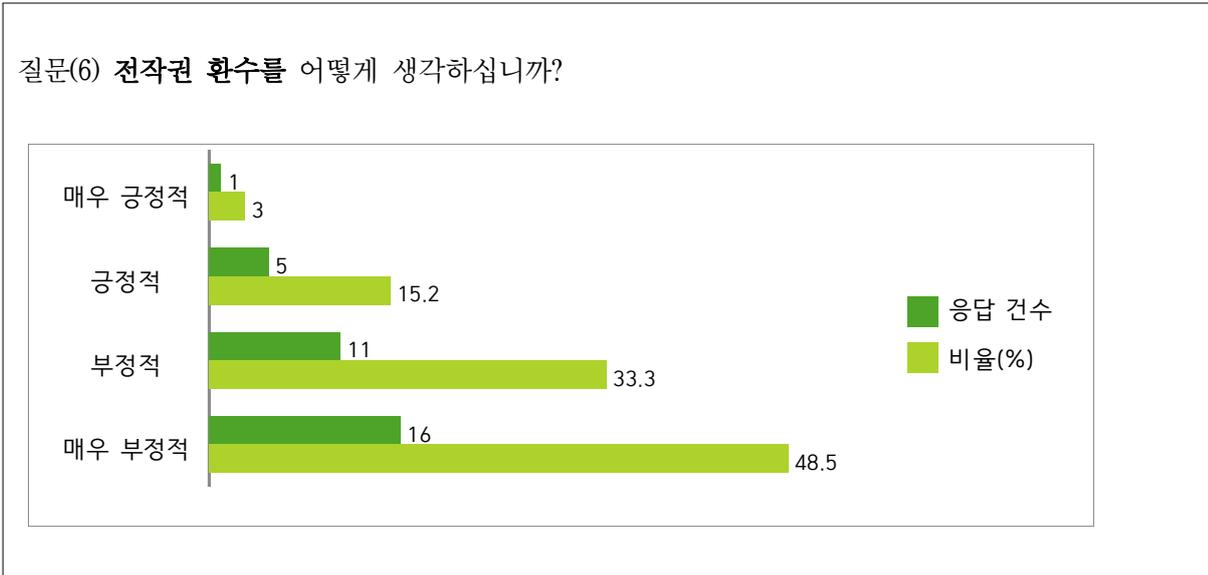


질문(5)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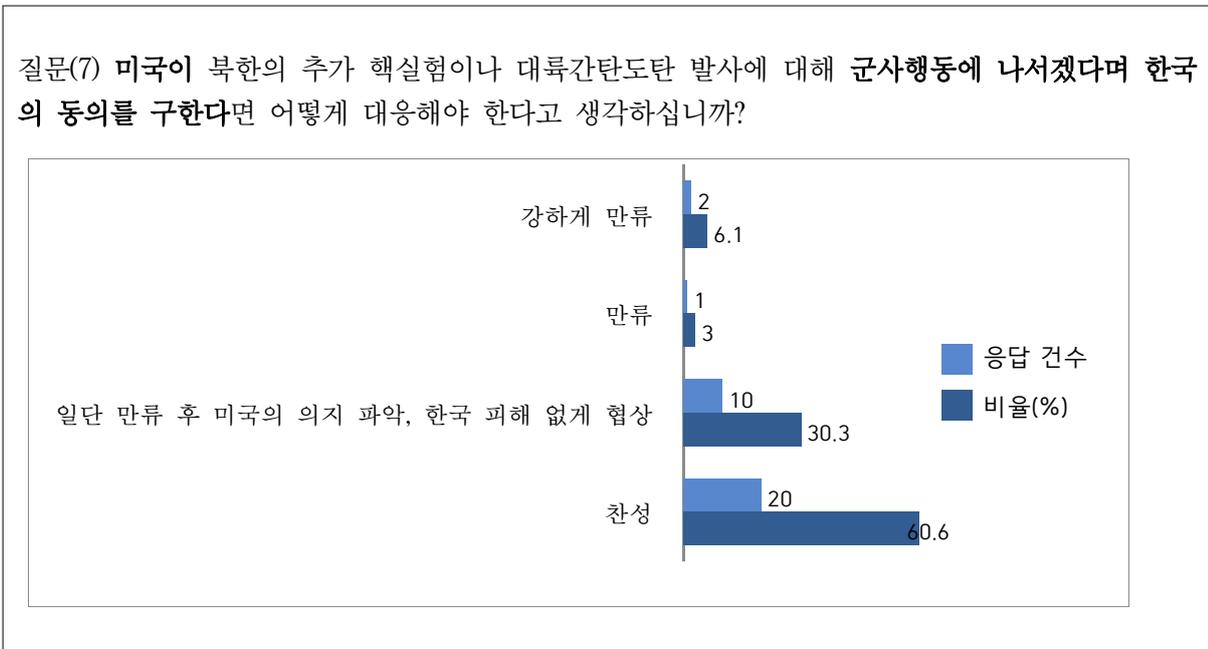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 16명, 부정적이 11명, 긍정적이 5명, 매우

긍정적이 1명으로 조사되었다(질문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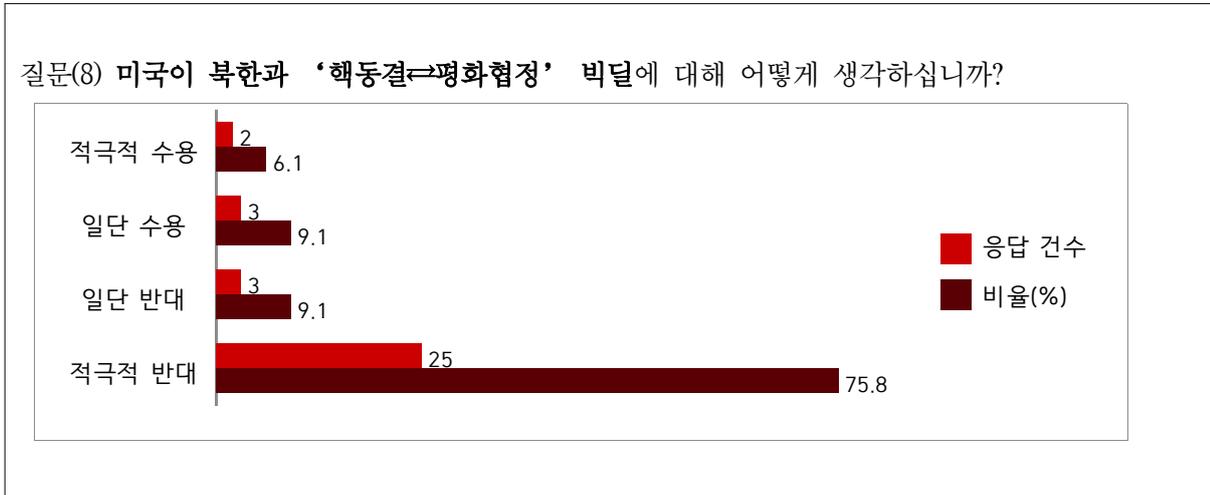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한국의 동의를 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이 20명, 일단 만류 후 미국의 의지를 파악하고 한국에 피해 없게 협상한다가 10명, 강하게 만류가 2명, 만류가 1명이다(질문 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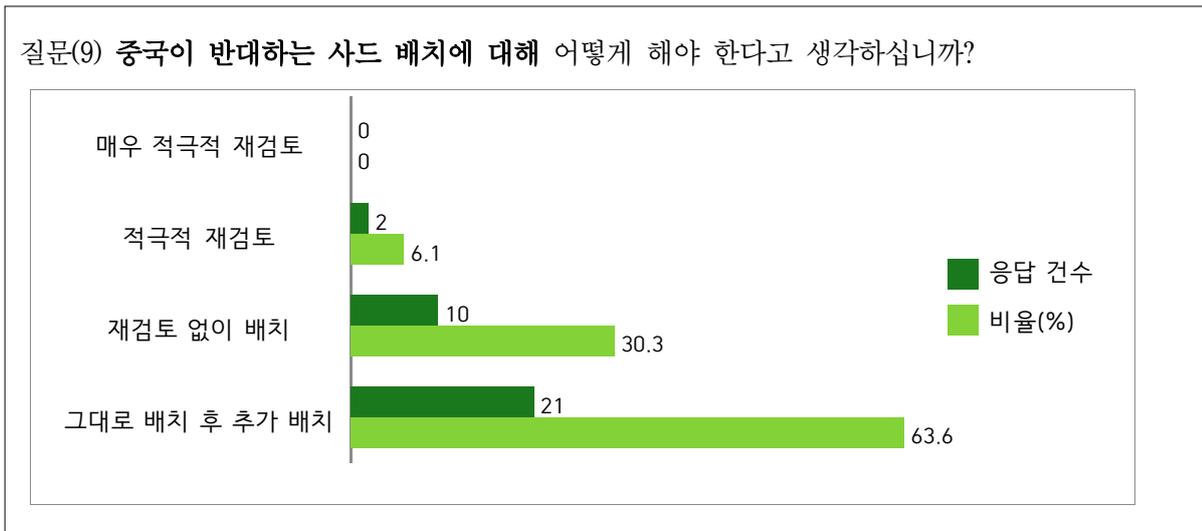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과 평화협정에 대해 빅딜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가 25명, 일단 반대가 3명, 일단 수용 3명, 적극 수용 2명으로

나타났다(질문 8 참고)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그대로 배치 후 추가 배치가 21명, 재검토 없이 배치가 10명, 적극적인 재검토가 2명으로 조사되었다(질문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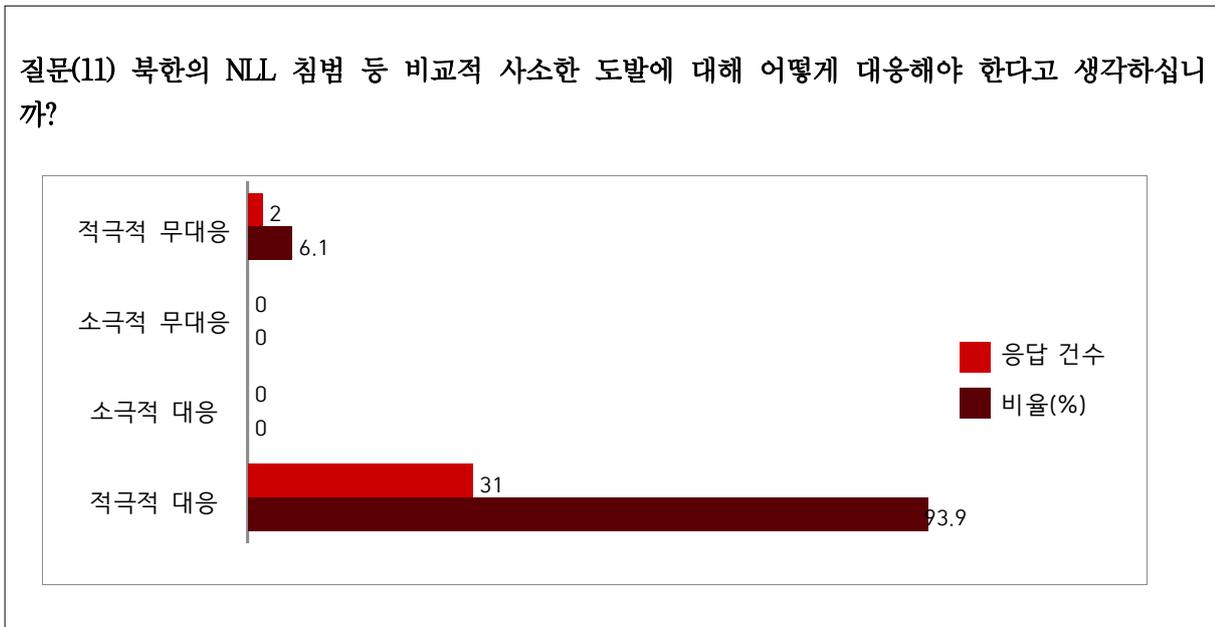


3. 북한 문제

북핵 미해결 상태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가 27명, 부정적이다 4명, 잘 모르겠다와 긍정적이다가 각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질문 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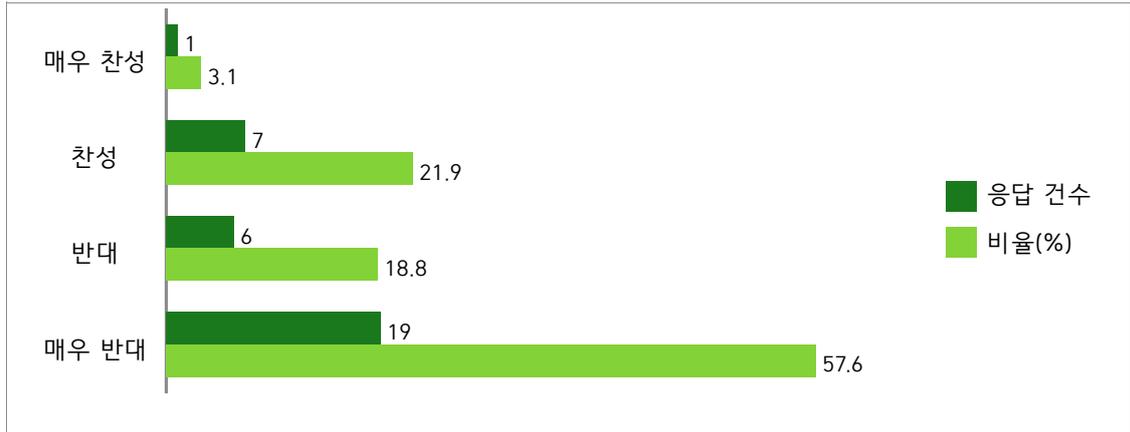


북한의 NLL 침범 등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 대응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극적 무대응이 2명으로 조사되었다(질문 11 참고).



북한이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이유로 4국간 평화협정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가 19명, 찬성이 7명, 반대가 6명, 매우 찬성이 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질문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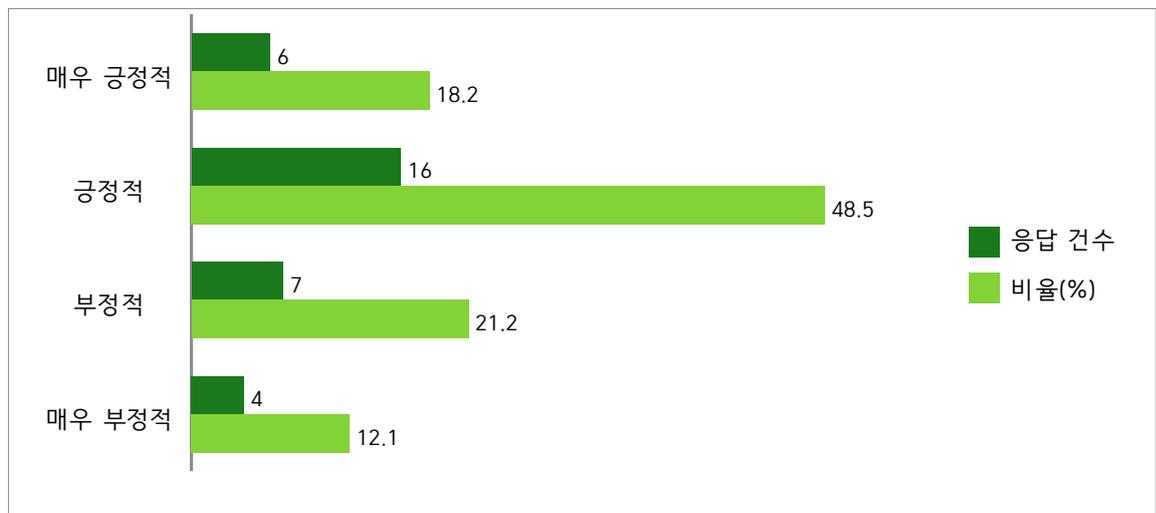
질문(12) 북한이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이유로 4국간 평화협정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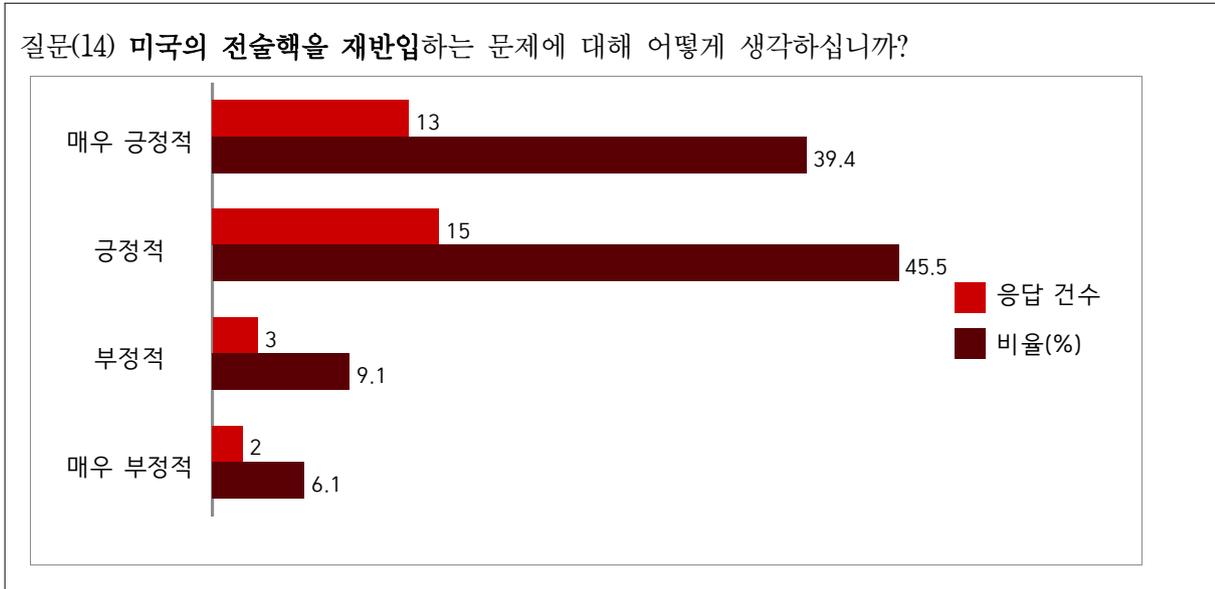
4. 국방 분야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16명, 부정적이다가 7명, 매우 긍정적 6명, 매우 부정적 4명 순이다(질문 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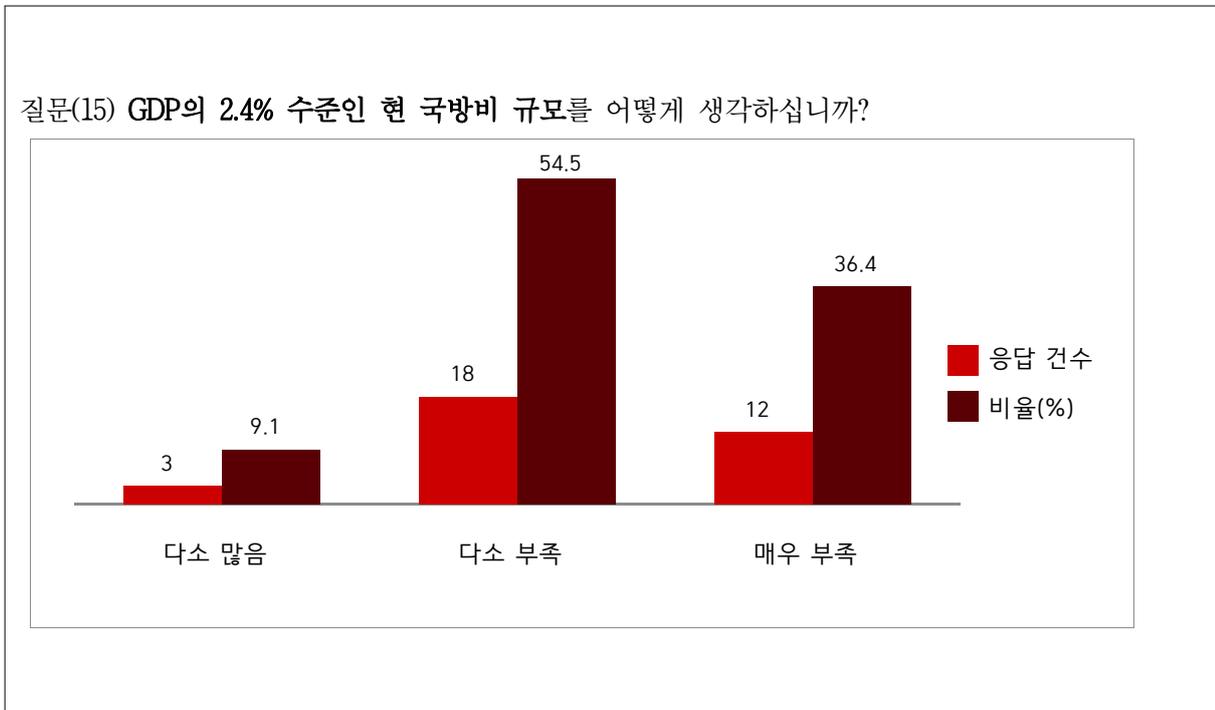
질문(13)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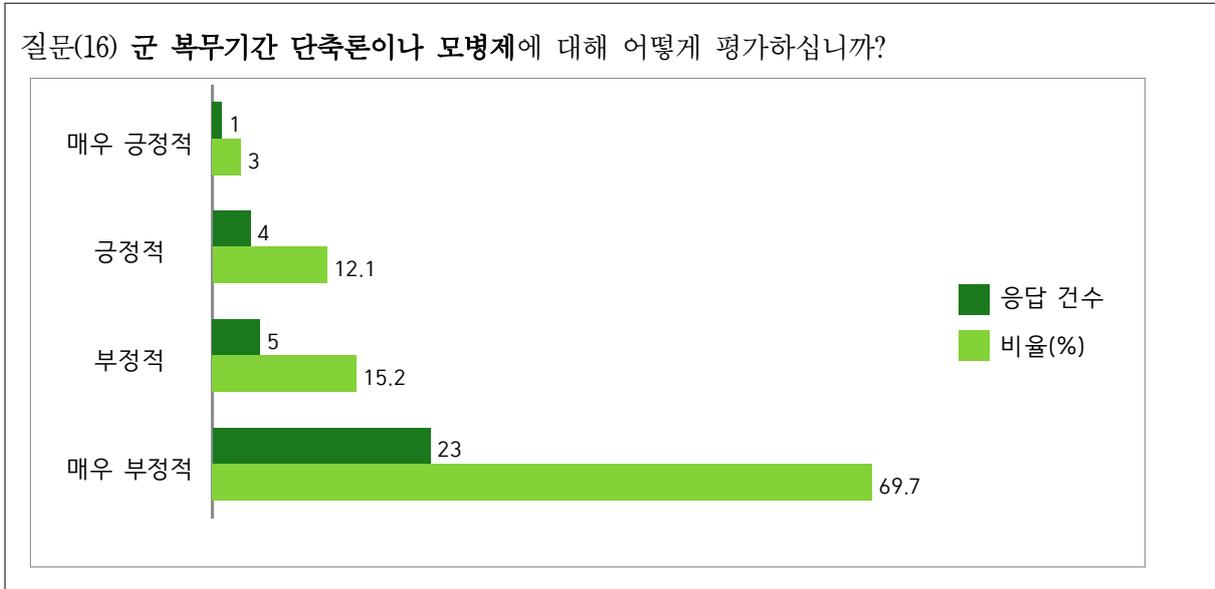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가 15명, 매우 긍정적이다가 13명, 부정적이다 3명, 매우 부정적이다 2명 순이다(질문 14 참고).



GDP의 2.4%인 현 한국의 국방비 규모에 대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18명, 매우 부족하다 12명, 다소 많음이 3명으로 조사되었다(질문 1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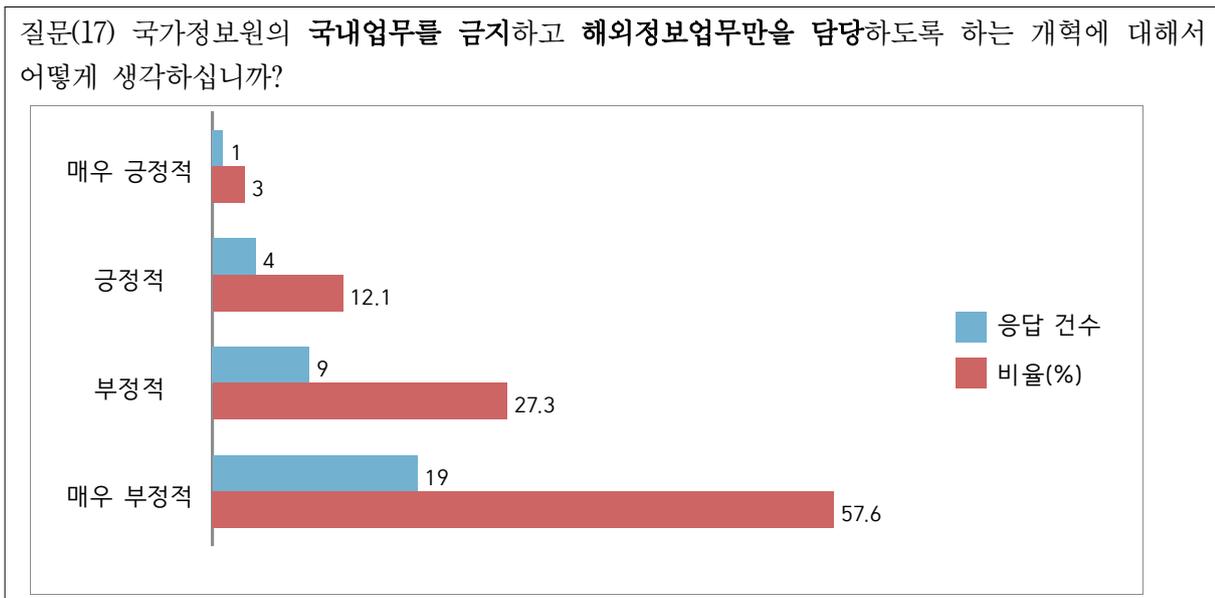


군 복무기간 단축론과 모병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23명, 부정적이다 5명, 긍정적이다 4명, 매우 긍정적이다 1명 순이다(질문 1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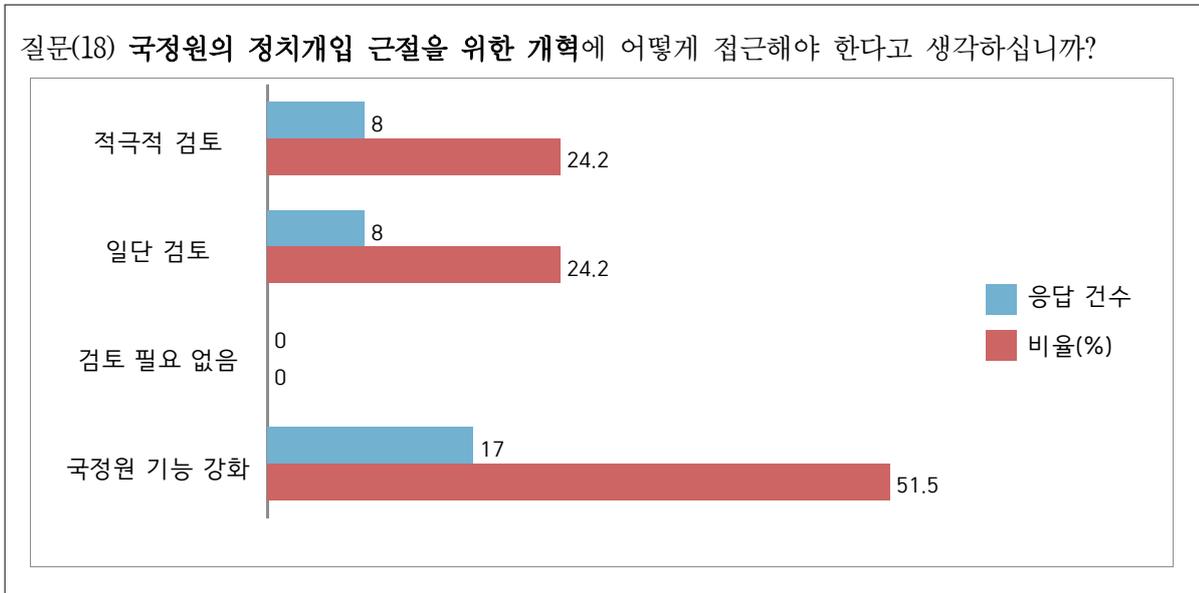


5.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의 국내업무를 금지하고 해외정보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가 19명, 부정적이다. 9명, 긍정적이다 4명, 매우 긍정적이다 1명 순이다(질문 1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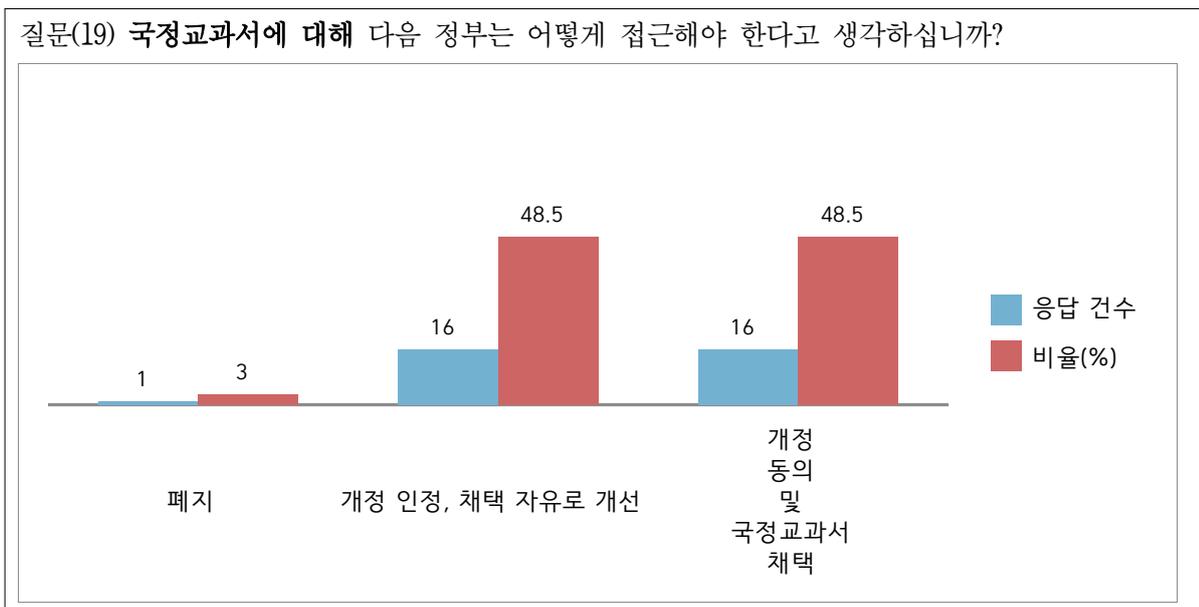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개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국정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가 17명, 일단 검토해야 한다가 8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가 8명으로 조사되었다(질문 18번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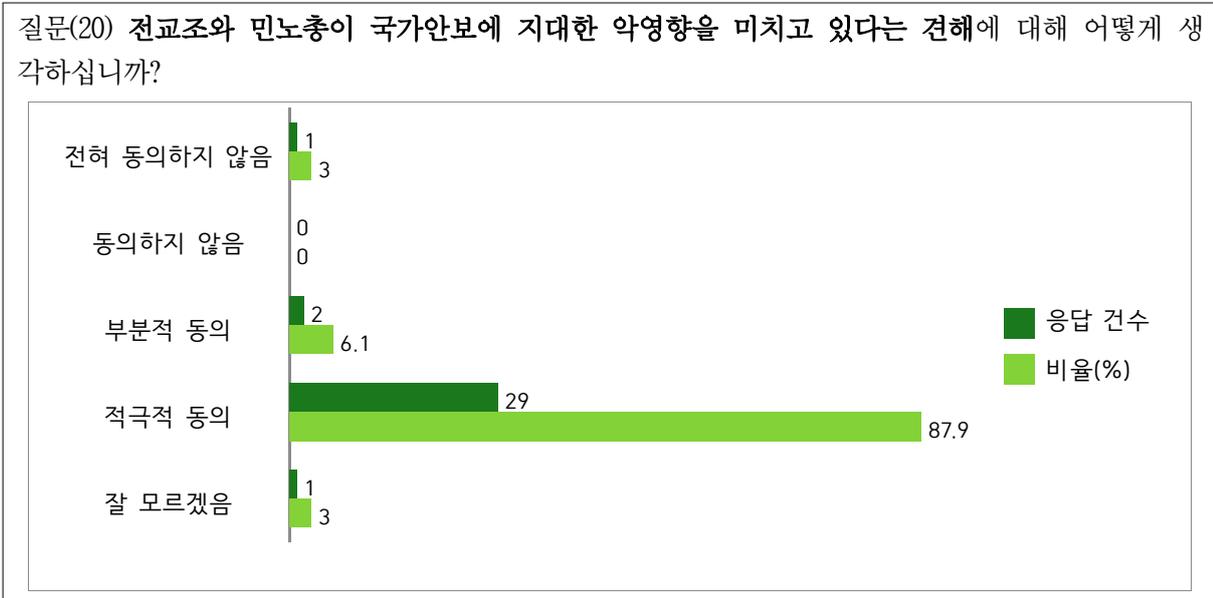


6. 기타

기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개정 동의 및 국정교과서 채택이 16명, 개정 인정 및 채택 자유로 개선이 16명, 폐지가 1명이다(질문 19 참고).



전교조와 민노총이 국가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29명이 적극 동의, 2명이 부분적 동의, 1명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문 20 참고).



Ⅲ 결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안보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안보 전문가들 대부분은 국가의 지도자가 안보 대북 통일 문제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일부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대로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였으며, 소수 재검토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나,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 의견이었고, 소수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기타 국내 업무를 금지시키는 국정원 개혁에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고, 전교조와 민노총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수 동의했다.

〈붙임〉 설문 참여 전문가 명단(총33인)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2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3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4	김정봉	한중대 교수
5	김충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6	김태우	건양대 교수/前 통일연구원장
7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8	박원곤	한동대 교수
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0	손정목	前 해군참모 차장
11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12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13	안명철	NK위치 대표
14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15	엄태암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6	염돈재	건국대 초빙교수
17	오일환	前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18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19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20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21	이민룡	숙명여대 교수
22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23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24	이지수	명지대 교수
25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26	장광일	前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동양대 국방기술대학 학장
27	전옥현	서울대 초빙교수/ 前 국정원 제1차장
28	정태진	평택대학교 교수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29	제성호	중앙대 교수
30	주재우	경희대 교수
31	최창렬	용인대 교수
32	한희원	동국대 교수
33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